

삼위일체형 산학협력



김병일
순천대학교 교수
061-750-3552

나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전남 광주권역의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단의 총괄책임자를 맡고 있다. 그동안 1단계 5년간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2단계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이 글에서 지난 5년간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단장을 맡아오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간단히 적어보고자 한다.

산학협력이라는 것은 대학의 지식과 기업의 기술이 상호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혁신을 추구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후손에게 행복한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산·학·관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은 우리 미래의 후손에게 행복이 가득한 오염되지 않은 국가, 이른바 저탄소 녹색기술로 부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목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일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대원칙의 관점에서 산·학·관이 협력해나가고 있으며 이 협력은 미래의 녹색 기술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

산업계에서 볼 때는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상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그것을 기술 개발하여 지적 재산을 확보 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혁신이 없으면 기업의 미래는 없다는 위기감속에서 산·학·관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산학에는 미래의 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과학 기술자와 연구자들이 있으며, 산·학·관 협력에 의하여 이들 연구자들에게 연구의욕을 갖게 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고 있다.

따라서 산·학·관 협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에 대한 공헌과 새로운 기술의 혁신,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최근에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특히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과 같은 대학과 기업, 정부가 협력하여 산학협력을 일괄적으로 추구하는 산·학·관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산·학·관 협력은 큰 결실을 맺어 가고 있으며, 특히 산업계 측에서 볼 때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산·학·관 협력에 대하여 불만도 있다. 예를 들자면 산·학·관 협력을 통한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얻어진 성과에 대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또한 어느 정도 기술가치가 있는지가 명확하지 못하고, 각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연구분야와 산·학·관 협력분야가 잘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도 있다. 특히 대형 기술개발 사업인 경우는 예산도 많고 장기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기업의 특성상 담당 책임자가 자주 바뀌고, 고용 불안으로 사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쑥쑥 연구개발의 진척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학이 추구하는 기술과 산업계의 기술 수준이 격차가 심해서 단순히 산학협력 실적만으로 마무리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변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공한 기업도 많이 있다. 그 기업들의 성공배정은 기술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있으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연구 개발할 과제를 설정하고, 연구 조직 체제를 구축하여 인재를 배치하며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 한다. 특히 기업의 CEO는 해당 기술 분야를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연구를 기울리 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구개발을 위한 강력한 추진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산·학·관 협력은 산학협력을 통하여 성공한 기업같이 대학과 기관도 동일한 자세로 일을 추진한다면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이 인재를 배치하는 방법과 같이 인무와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그 분야에 의욕을 가지는 담당자를 배치한다면 가장 큰 성과를 나타낼 것이다. 산·학·관 협력의 성공은 이와 같이 성공한 산업체의 방식을 모델로 해서 상호 협력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산·학·관 협력의 성공을 위한 삼위일체형 협력이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얻어진 성과는 기업에게 돌려주고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갖게 해 주어야

하며, 기업은 대학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최근에 정부는 산학인력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교수가 기업에서 근무하고 기업의 CEO가 대학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전임 근무제도이다. 이 제도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대학과 기업의 기술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산학협력의 기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수나 산업체 CEO가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도가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학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끝으로 산학협력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삼위 일체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산학협력을 통하여 성공한 기업의 모델을 발굴하여 대학과 기관이 협력 할 수 있는 모델도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우수한 인재는 지역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양성되어야 하며, 산·학·관이 공동으로 협력해야 한다.

| 기술표준 2009.3